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2.(일) 12:00
(지 면) 2026. 11. 23.(월) 조간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가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 11월 23일(월)부터 간편결제·송금 등 비대면 고객확인 시 은행 수준의 신분증 진위 검증 실시
- 은행·증권·보험사에 이어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신분확인 서비스 확대
-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확인으로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범죄 예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3일(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페이는 2026년 12월 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연계·개시 예정

이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도 기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 개시는 지난 7월 9일 행정안전부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체결한 '전자금융업계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해 온 민관협력의 결실이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업무협약 이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자금융업계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우선, 7월 27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함께 기존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중계 기반을 활용하여 카카오페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토스는 전자금융업계 최초로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의 유효성 확인뿐 아니라 사진정보를 포함한 신분증 진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개시에 앞서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 필요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과 운영·관리 등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탰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페이·토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이버페이로도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에서 안전성이 강화된 신분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토스에서는 2025년 한 해 각각 약 750만 건, 약 1,000만 건의 비대면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만큼,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전자금융업계 전반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시는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간편결제와 송금 환경에서도 은행 수준의 안전하고 정확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신분확인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이택길	(044-205-3141)
		담당자	사무관	박지연	(044-205-3155)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김은철	(02-3145-7140)
담당 부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정현	(02-531-3100)
		담당자	팀 장	이제은	(02-531-31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카카오페이 · 토스 고객확인 시 적용화면 (예시)**

